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택민



경제와 인민공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경제발전의 시동을 걸어 30년 만에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2030년에 일본을 따라잡고 2050년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말이 신기루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이미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두 대국(G2)이 되었고, 2015년에는 제조업의 가치생산이 미국을 능가하리라 하니 중국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불허한다.

중국에서 전하는 두 가지 소식

않았다. 대신 비관자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그들을 혁명 반대 세력으로 지목하여 숙청하기 위해 젊은 청소년들을 선동하여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렇지 만 혁명은 엄청난 파괴 작용을 동반했다.

그런데 이 같이 경이적인 발전의 소식에 들떠 있는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역사의 유물과 같았던 '마지막 인민공사'가 퇴출되리라는 소식이 중국 사람들에게 다시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하베이(河北)성에 있는 작은 마을은, 상부의 자시를 거부하고 지금과 같은 30여 년간 집단노동과 공동분배 체제로 운영되는 인민공사를 고수해 왔다고 한다. 이 마을을 30여 년간 이끌어온 가오

녕환(高能權·91) 당서기는 능지와의 거리, 작업의 난이도, 일의 깊壑과 더러움 등을 면밀히 나눠 작업을 배분하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노동에 참여토록 독려

했다. 간부들이 앞장서고 합리적인 노동 및 생산물 분배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노동에 참여하여, 이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 차별화될 만큼 경제적 부를 일궈냈다. 그러던 이 마을도 최근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쇠퇴를 거듭하고 있어 인민공사 자체가 해체될 위기를 맞고 있다.

처음 인민공사가 설치될 때 중국은 빈부격차, 부패, 나태와 태만, 무능과 외고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인민공사는 이 같은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획기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명의 수단으로 추진되었으나 오히려 중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원흉이 되어 폐기 처분되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남아 있던 마지막 인민공사가 해체될 위기에 처한 시점에, 한편으로는 제조업의 가치생산이 미국을 능가하리라는 낭보가 전해지는 가운데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민공사를 통해 착착하려고 했던 문제들, 예를 들면 부정부패, 빈부격차, 공산당의 일당독재, 출축과 같은 국가사회적인 문제들이 다시 거대한 괴물처럼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중국 사람들의 가슴에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래 들어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중국 관련 보도가 부쩍 늘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특히 눈에 띠는 소식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중국의 '마지막 인민공사'가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에 중국 제조업의 실질부가 가치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얼핏 보면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49년 이후 중국 현대사의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일시 온건 개혁을 추진하다가, 1958년부터 모든 생산수단의 사유가 부정되고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인민공사가 설치됐다. 인민공사는 대약진운동과 함께 혁신혁명을 명실상부하게 완성하고자 추진된 혁명 전략이 목표였다. 이 같은 공유제는 일찍이 토마스 모야가 열려했던 것처럼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 결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모택동에게 돌아 있으나 그는 진실로 과오를 인정하지는

시설

'신종플루' 방역대책 재점검 시급하다

국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2명이 사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16일 사망한 63세 여성은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 누구나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방역대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2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2천99명이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환자 대부분이 완치돼 신종플루 안전지대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2명이 잇따라 사망하고 대구에서 여고생들이 집단감염되면서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 바이러스 증식이 용이한데 해외여학연수를 마친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면서 집단생활에 학습하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개인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신종 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그럼에도 보건당국과 일선의료기관

의 신종플루 대응체계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사망자 모두 증상이 발생한 후 1주일이 지나서야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고 지난달 21일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고서도 한 달 가까이 겨울병원과 겨울영국이 지정되지 못했다. 백신 공급시기도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은 11월부터 초중고생과 군인 등 1천300만명에 대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나 이미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신종플루는 국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는 만연되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미어너스 10%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감염이 확산되자 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갖고 철저히 예방하는 것뿐이다. 국민들도 개인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신종 플루에 대한

행정구역개편 정략적 접근 배제해야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데다 정치권도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여

년 전 갑오경장 때 만든 것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는 상관없이 공무원 정원과 행정 비용은 증가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이해대립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구성돼 각 당에서 시안을 내놓았으나 미디어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행정구역 개편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당리당략에 밀려 합의가 무산돼 왔다.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 지방행정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정치권이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에 동의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행정구역 개편은 100년 앞을 내다보

고 국가경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토론판단에서 전문가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적 연고가 강한 현재의 정치구도상 각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행정체제 개편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을 주도할 경우 또 다른 갈등만 앙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행정과 경제, 문화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정략적 계산을 배제한 채 행정구역 개편에 추진해야 한다. 종합적인 기구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無等鼓